

# 에너지 自由競爭時代와 企業體質의 개선

## 공급과잉의 二重構造

IEA(國際에너지機構)는 올해 자유세계 석유소비량이 하루 4천 680만배럴로 지난 해와 비슷한 2.6% 정도의 신장률을 보일 것이며, 그중 선진국의 신장률은 지난 해의 3.3%보다 크게 낮아진 1%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국가들의 石油수요는 83년 3/4분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2차석유위기 이후의 수요감축을 전제로 한 조정이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에너지 정세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石油부문에서는 OPEC(石油輸出國機構)가 감산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石炭과 天然가스도 공급력 증대와 수급불균형에 따라 국제적 마찰로까지 격화되고 있다. 국제석유시장에서는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시황이 계속 침체되고 있고 반면, LNG와 석탄수출국들은 그들대로 정치를 배경으로 한 산유국들의 石油공급압력을 피해 공급을 확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 또 다른 석유시장위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石油부문의 聖域으로 여겨졌던 내연기관 분야에도 석유화학분야인 합성휘발유·메탄올 및 LNG등 代替品과 경합품이 대두되고 있다.

石油 자체가 공급과잉인데다 競爭에너지도 공급과잉으로 石油시장에의 침식을 노리고 있어 石油

시장은 이중의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 정세하에서 石油의 위치를 어떻게 확보해갈 것인가? 이 상태를 방치해 둔다면 石油産業은 예상치 않은 침입자에 의해 큰 타격을 받을 위험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산유국·석유산업·개별석유 기업의 공통된 문제이다. 中東 OPEC제국과 같이 감산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가격 중심주의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유럽과 美國처럼 가격을 변동시켜서 판매량을 움직여가는 판매량 중심주의로 생각할 것인가. 각각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戰略의 선택은 당연히 달라질 것이다.

이것은 또한 개별기업의 전략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시장동향에 따라 각 기업체질의 이점을 살려 판매가격을 조정, 판매를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제도적으로 통제를 강화하여 수급을 조절, 가격을 유지할 것인가. 전자의 전략을 선택할 경우 시장은 활성화될 것이나 기업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기업이 생겨날 것이다. 반면 후자의 방법을 쓸 경우에는 취약한 기업에게도 共存할 기회를 주는 이점이 있는 대신, 시장이 활력을 잃거나 競爭에너지의 침투에 따른 시장규모 축소로 마침내는 부득이 생명력을 잃는 기업도 나타날 것이다. 지금의 石油시장이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이 어떤 戰略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1차에너지 전반의 공급과잉이 계속되는 한 石油企業은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需給 중심주의에서의 탈피

세계 석유수요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石油 가격은 당분간 안정세를 보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약간 하락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지금 石油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크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와 가격에 의한 수요 억제효과가 약화되어 競合에너지가 후퇴하고 石油시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견해로 갈라져 있다.

日本의 경우 에너지수요는 95년경까지 최종에너지 소비 베이스로 年率 2.2-2.5% 신장하고, 石油은 1.8-2.2% 증가할 것이라는「日本에너지經濟研究所」의 견해에 대해, 95년대에 가면 에너지수요는 급속히 포화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도 부상하고 있다. 철강·화학등 에너지 多消費型 산업 대신에 電子産業과 같은 에너지少消費産業이 늘어나고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생산재는 점차 수입대체될 것이다. 운수와 민생부문에서는 자동차·냉장고등의 에너지 사용 내구소비재가 절정에 달할 것이다. 에너지절약 기술과 機器도 진보될 것이며, 태양광등 비상업에너지의 소비가 늘어나 상업적 에너지의 소비가 억제되는등 에너지 수요포화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면 에너지産業으로서에는 이에 대응한 체제를 검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石油産業의 일부에서는 현행 精油産業이 21세기까지도 못갈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일고 있다. 현재와 같은 경직적인 消費地精製主義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며, 석유제품의 수입대체도 진전되고 競合에너지도 진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현재와 같이, 과거에 완성한 기술에 의존하여 정제하는 것만으로는 부가가치도 낮아지고 발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쇠퇴할 가능성도 있어, 신소재의 생산이나 고도기술 분야로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政策에 있어서도 수급균형만을 목적으로 한 정책을 탈피해야 될 것이다. 석유위기 이후 에너지수요가 꾸준히 신장할 것을 전제로 하여 공급을 여하히 수요에 맞출 것인가하는 需給중심의 에너지 政策만을 전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가 현재의 LNG 프로젝트의 파임과 석탄마찰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한 수급중심 에너지

정책 대신에 새로운 政策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需給중심 에너지정책은 「3차 석유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에너지수급이 팽박하여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으나, 언제까지나 이러한 전제를 설정해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石油공급은 팽박받을 시기가 올 것이라는 전제를 두지 않는다면 비축과 石油代替 에너지 개발등 현재의 에너지 정책을 대폭 수정, 중지할 수 있으며, 石油稅 등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原子力은 석탄 화력보다 정말 코스트면에서 유리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공급은 팽박받을 것이라는 전제를 폭넓게 고찰한다면, 기존에너지 産業을 비롯해 국민경제에 안겨주는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는 여지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에너지 政策을 담당하는 관계당국과 에너지 정책 코스트의 부담자이면서 일면으로는 공급팽박에 의해 이익을 얻는 입장에 있는 에너지産業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을 제시하지 않으면 석유위기의 조정은 진정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産業은 의도적으로 위기를 설정하고 있다가 고의로 대응을 태만히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공급팽박의 전제를 버리고 需給중심주의를 탈피할 경우, 新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팽박·수급균형을 전제로 한다면 안정공급이 기본방향이 될 것이며, 육성·증산·多角化 등이 선택될 것이다. 지금의 에너지 政策은 안정공급·위기대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포화·파임을 전제로 한다면 에너지정책의 방향은 자유선택·자유경쟁·가격기능의 중시·통제배제·저렴한 가격추구 등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기능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産業政策은 국제경제의 발전과정에 대응하여 한 나라의 산업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에너지産業의 기초가 바뀐다면 각국의 에너지 政策도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이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에는 새로운 사상과 철학이 요구되는 것이다. 에

너지 정책도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思想과 哲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재 활성화 서두르는 石油市場

전반적인 에너지의 공급과잉 때문에 에너지 자유 경쟁시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石油만이 법률제도에 의해 보호받는다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물며 石油產業은 유아산업도 쇠퇴산업도 아니다. 성숙화하고 재활성화가 필요할 뿐이다.

사우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 있어서 石油는 특수한 물자이다. 법률적으로 수입규제 한다는 주장이 통할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을 냉정히 판단하면 석유업계의 재활성화는 국내시장에만 눈을 돌려서도 안되며, 외부의 압력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효율화를 빨리 이룩한 기업일수록 경쟁력이 강화되고 상대적 우위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효율화를 촉진하는 것이 각 기업의 지상과제가 될 것이다. 석유업계의 재활성화는 결국 각사가 어떻게 기업체질을 개선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법률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업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동시에 에너지 政策도 石油稅制에 의해 석유가격을 끌어올리고, 石油稅收로 代替에너지 대책을 추진하고, LNG를 팔아치우기 위해 석유시장을 압박하는 등 부당하게 石油를 회생시키는 정책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石油의 펌박이라는 전제를 버린다면 스스로 해결될 문제이다.

작년 12월 「日本·아랍 에너지 국제회의」에서 아랍 산유국측은 原油의 안정공급을 요구한 바 있

다. 소비국으로서는 국내수요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공급이라고 보고 있으나, 산유국은 국내 개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급량을 결정하고 이를 소비국이 도입하는 것이 안정공급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공급에 의한 수요창출이 산유국의 정책이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비국은 需給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탈피하려 하고 있으며, 산유국은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對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中東 연안제국의 원유공급이 각 소비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EC 10개국 이 1974년에 약 63%에서 83년에는 30%대로 떨어졌다. 그 반면에 日本은 65%에서 60%로 거의 변함이 없다. 따라서 中東산유국으로서는 日本이 실질적으로 최대의 시장이 되고 있다. 유럽시장은 70% 정도까지 스파트 거래로 원유공급을 하고 있으나, 日本은 현재 대부분이 공식가격에 의한 장기계약이다. 日本의 에너지 정책은 공급핍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中東산유국의 장기 안정공급력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시장이 스파트 가격을 지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日本의 원유조달방식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하류부문만 갖고 있는 나라의 石油產業은 原油 공급과잉시에 기본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된다. 앞으로의 석유시장은 효율화, 재무체질의 개선, 原油 도입코스트의 인하에 의한 경쟁시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쟁체질을 갖추는 기업만이 에너지 자유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

〈雙龍精油·주간석유에너지정보〉

# 아껴쓰는 에너지

# 내집크고 나라큰다